

민 전남광주특별시장 시민배심원제 '백지화'... 거센 반발

더불어민주당의 초대 전남광주특별시장 경선에서 혁신공천안으로 제시됐던 '시민배심원제'가 백지화되면서 후보들 사이에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당의 결정을 따르겠다"는 수용적 입장과 "공천관리위원회의 제안을 번복하고 무력화해 유감"이라는 반발이 교차하고 있다.

◆시민배심원제 '없던 일'로...사실상 '5대 50 유지'

6일 지역 정가에 따르면 민주당 최고위원회는 이날 전남광주특별시장 경선 통과 관련해 권리당원 100% 예비경선을 통해 현재 8명의 후보를 5명으로 압축한 뒤 5인 본경선에서 순회 합동연설회 후 권리당원 50%+일반 시민 50% 여론조사로 순위를 가리기로 했다.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 1, 2위를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진행하기로 했다.

관심을 모인 시민공천배심원제는 부작용을 우려해 '없던 일'로 하고, 대신 의견권 없는 정책배심원제를 대체 도입하기로 했다.

조승래 사무총장은 "시민배심원제는 당헌 당규에 있는 경선방식이고 장점이 있다"면서도 "여전히 배심원제가 지닌 위험성이 불안 요소가 있다는 평가도 있었다"고 시민배심원제 백지화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에서 속의 기능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정책배심원을 두기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정책배심원단은 경선 일정 중 연설회, 순회토론회 등에서 토론패널로 참

"배심원제 리스크 해소, 당 결정 따르겠다"

"공관위 제안 뒤집기, 혁신공천 여행 유감"

석, 후보들에게 통합특별시의 최우선 과제, 정책 비전 등을 질의하는 역할만 맡고 의견결론을 었다.

경선 일정에 대한 "광주권 중심의 북부권과 전남 동·서부권 등 3개 권역으로 나눠 합동 연설회와 토론회 등을 진행하면서 통합특별시민들이 통합에 대한 비전과 후보자 정책 검증 등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현재 경선이 결정된 곳은 서울, 경기, 전남·광주 3곳인데 다음주 초 공고와 경선 후보등록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며 "전남·광주의 경우 권역별 순회연설회를 진행해야 해서 2주 간의 본경선 기간을 두려고 한다. 결정 기간도 5~7일 걸릴 것"이라고 부연했다.

◆후보별 찬반 엇갈려...리스크 해소 vs 혁신공천 여행

각종 여론조사에서 1위를 달리고 있는 민형배 의원 측은 "선수가 룰에 대해 말하는 것이 적절치 않고, 당원 주권과 1인 1표 원칙에 따라 시도민 선택 중심의 경선이 치러져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시민배심원제에 대해서는 "과거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 이른바 '보이지 않은 손' 등 부작용과 논란이 많았던 게 사실이다. '배심원 리스크'가 해소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전남 동부권 유일 주자인 주철현 의원

도 "당의 결정인 만큼 월가월부할 사안은 아니다"며 말을 아낀 채 최고위 결정을 받아들였다.

호남발전특위 수석부위원장인 이병훈 후보는 "시민배심원제는 시·도민이 후보들의 비전을 꼼꼼히 살펴본 뒤 주권행사를 할 수 있어 소위 '깜깜이 선거'를 막을 수 있는 장점은 있다는 점에서 (이번 결정이) 다소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당 결정이니 따라야 한다. 개인적으로는 상관 없다"고 말했다.

반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3선 신정훈 의원은 "시민배심원제는 중앙당 공관위가 공식 논의하고 합의해서 제출한 공천 혁신 방안인데, 이래적으론 사흘 만에 번복되고 무력화돼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신 의원은 "이번 선거의 역사적 의미를 고려해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 후보들의 정책과 자질을 검증할 수 있도록 공관위가 시민배심원제를 제안한 것인데 최고위가 이를 충분히 수용하지 않고 의결권 없는 정책배심원제로 축소해 혁신공천에 여행했다"며 반발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시민배심원제가 결국 최고위에서 기각됐다"면서 "공관위의 제안은 지역의 현실을 꿰뚫은 정확한 판단이었기에 그 아쉬움이 더 크고 유감"이라고 밝혔다.



경향래더불어민주당대표가6일 오전 전남영광군영광농협대회실에서 열린 민주당 전남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

강 시장은 "전남과 광주의 인구나 당원 수 차이는 엄청난 현실이고, 균등한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는 경선은 성공적인 통합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며 "특히 '당원 100% 예비경선'으로 당원주권주의는 실현됐음에도, '등가성' 같은 기술적 잣대로 배심원제를 무산시킨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4선 중진 이개호 의원은 "지역 여건과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엉뚱한 결

정"이라고 반발했다. 경선 심판 역할을 하는 공관위 결정이 사흘 만에 뒤집힌 것을 두고도 "당혹스럽다"는 반응이다.

광주 정준호 의원은 "배심원제는 전문가 식견으로 후보들을 보다 면밀히 검증해 보자는 취지인데 왜 갑자기 번복됐는지 이해가 가질 않는다"며 "일래 취지대로, 공관위 추천대로 가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밝혔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최고위 결정에

따라야 하지만 아쉬운 부분이 없진 않다"며 "ARS 여론조사 방식을 심층면접 방식으로 보완해 신뢰도를 보다 강화하는 방안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정가 관계자는 "오락가락한 경선틀을 두고 후보들 간 입장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는데, 결선으로 갈 경우 합종연횡으로 2개의 빅텐트가 체결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말했다.

/뉴스

행정통합특별법 '지방세율' 조항에... 교육재정 감소 우려

5일 국무회의서 '전남광주 통합특별법' 의결

특별법에 '통합지역 지방세율 ±100% 조정'

교육계 "지방교육세 감액·보전 장치 無" 우려

"현행법도 지방세율 ±50% 조정... 가능성 ↓"

전남광주 통합특별법이 국무회의 문턱을 넘으면서 지방세 조정 특례에 따른 교육재정 감소 우려가 불거지고 있다. 교육계는 필수 교육 사업이 위축될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는 반면, 정부는 실제 감액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는 입장이다.

6일 교육계에 따르면 전남 오전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8회 임시 국무회의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법'을 위한 특별법안이 원안대로 가결됐다. 이에 따라 전라남도도 광주특별시는 올해 7월 1일부터 통합특별시로 공식 출범한다.

교육계가 주목하는 것은 이 특별법에 담긴 지방세 조정 특례다. 행정통합특별법은 통합 지역에 대해 지방세 세율을 ±100%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지방교육세가 조정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지방세 세율이 100% 감액될 경우 전국 시도교육청의 전입금은 총 1조8570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지역별로는 대구·경북 7165억원, 대전·충남 5982억원, 광주·전남 5423억원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

지난달 13일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는 이러한 우려를 공개적으로 제기하며 보전 장치의 부재도 함께 지적했다. 교육감협은 "행정통합특별법에 따라 지방세율을 통합·조정하는 과정에서 지방교육세가 조정 대상 항목에 포함될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교육재정에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타격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방교육세 감액에 따른 자동 보전 규정이 없고, 특별교육교부금 등 국가 차원의 보원 재정지원 근거도 명시되어 있지 않은 등 과도기적 재정안정화 장치 부재 등의 문제를 안고 있다"며 "세율 조정으로 교육재정 감소는 예상되나 교육재정 감소에 대한 보전 장치는 없는 구조가 형성될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재정 축소가 현실화될 경우 그 피해는 교육 현장으로 고스란히 돌아올 것이라



3일 오후 전남 나주시한국에너지공과대학 대강당에서 광주시와 전남도가 주최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법 국회통과 기념 시·도민 보고대회가 열리고 있다.

는 우려도 이어졌다. 교육감협은 "학교운영비 감축, 기초학력 지원 축소, 돌봄·특수·다문화교육 축소, 시설개선 지연, 교육격차 확대 등이 불가피하다"며 "지방교육재정은 인건비·학교기본운영비 등 경직성 지출 비율이 높아 실질적 조정은 교육복지 및 학생 지원 사업부터 축소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교원단체도 지방교육세 감액을 우려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은 "지방교육재정의 핵심 재원인 지방교육세가 대폭 삭감될 위기에 처해 있다"며 "기초학력, 돌봄, 특수교육 등 필수교육 사업이 위축되지 않도록 지방세율 조정 항목에

서 지방교육세를 제외하고, 이전 법안 심사 과정에서 논의되다 사라진 '통합특별 교육교부금 지원' 조항을 부활시키는 등 추가 지원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지섭 전남교사노동조합 정책실장은 "교육재정 확보 조항이 전무한 통합특별법은 사실상 부도난 수표"라며 "예산 없는 정책은 결국 농산어촌 학교의 피해로 귀결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정부는 실제 세율 감액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는 시각이다. 현행 지방세법도 ±50% 범위 내 세율 조정을 허용하고 있지만 실제로 적용한 사례가 거의 없는 만큼, 이번 특례 역시 마찬가지일 것이라는 논리다. /뉴스

광전매일신문

TEL. (062) 525-9775 FAX. (062) 528-4566

주최 | 영암군 YEONGAM-GUN 주관 | 영암문화관광재단 YEONGAM CULTURE & TOURISM FOUNDATION 후원 |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공사 KOREA TOURISM ORGANIZATION

2026.4.26. (토) **영암 왕인문화축제** 4.4.(토) - 4.12.(일) 전라남도 영암군 왕인박사 유적지, 상대포 일원

위대한 항해